

“내란 속 도민 보호 위한 행정 조치”

“중동 사태... 근로자 안전 최우선”

김관영 지사, 이원택 의원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공세에 “왜곡, 추측” 정면 반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이원택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 지사는 “가정과 왜곡, 추측에 기반한 흑색선전에서 벗어나 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응 회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회의는 위험적 명령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정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도청 출입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직원 비상근무 조치를 내린 것과 도청 출입 통제를 연관 짓는 것은 내란 순응이라는 전제를 깔고 억지로 연결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비상근무 명령은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 조치”라며 “이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청 야간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청사 방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일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도민안전실장의 ‘계엄 매뉴얼’ 발언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매뉴얼을 설명한 것일 뿐, 이를 실제 행정 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계엄 매뉴얼’에 따라 도청이 움직였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한 설명을 사실처럼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근무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비상근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근무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매뉴얼 상 35시간이 지역 계엄시정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일반적인 제도 설명과 불과하다”며 “이를 실제 협조나 동조 행위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당시 공직자들은 민주주의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를 왜곡해 계엄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과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해당 사안은 철저한 사실 검증을 거친 결과”라며 “이미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도 과도한 정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인 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진사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해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지역 진출 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차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업별 연차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파급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많이 듣고 실용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8일 기준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토부는 현지 상황별로 정상 근무 또는 재택근무, 안전지대 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 합동 비상대책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일 상황 및 안전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민주 당대표 특보 임명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전북동·금암동)이 더불어민주당 특보 임명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관우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대표 특보 임명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4선 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전북과 전주의 핵심현안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소통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관우 의장은 “당대표 특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특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임승식 도의원, 정읍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예정지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이 19일 정읍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공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일원 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정재관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구 조성 방향과 공모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정읍시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내년 공모 신청을 앞두고 추진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계획과 투자심사, 부지매입, 관련 조례 제정 등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관계자들은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과 지역 특화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와 제안을 발표했다.

전북 시민단체, 도지사 후보에 정책대안 요구

균형발전·에너지 전환 ‘핵심’... 행정 통합 새로운 접근·에너지 기본소득입 등 제안

오는 6.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의제로 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와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이자 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인 이창엽 씨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전주YMCA 조정현 사무총장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전북이 현재 국가 균형발전 정책 변화의 중심에서 중대한 선

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곡 3북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 지역 내부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이 단순한 전력 생산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과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과제

를 제시했다.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국장 회의 공개 등 도민 소통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 활동 지원센터 설치,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생태복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해수 유통과 생태복원, 재생 에너지 이의 공유 등을 논의할 공론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도지사 후보자들이 책임 있는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정책 100선’ 준비... 청년 중심 시정 구상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국주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청년정책 100선’을 토대로 청년 중심 시정 구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주영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지역 청년들로부터 ‘청년정책 100선’을 전달받고, 이를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100선’은 ‘청년의 바람이 정책의 바탕으로’라는 주제 아래 △주거·생활 △일자리 △경제 △복지·문화·참여 등 3개 분야에서 총 100개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결혼·주거, 취업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이 집중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진화기업 인증제 도입, 결혼식장 및 웨딩 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 노동복지기금 신설, 청년 주거공간 ‘청춘별채’ 실질화, 프리랜서 청년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구도심 주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존 행정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정책을 제안한 한 청년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매력 넘치는 고창 만들겠다”

유기상 전 고창군수, 민선9기 군수 선거 출마 공식화

조국혁신당 소속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고창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군수는 “고창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전 군수는 이날 출마 슬로건으로 “고창을 고창답게, 살고 싶은 매력 넘치는 고창을 제시하며 △농생명식품산업과 생태문화관광산업 육성 △청년과 농민 중심 정책 △농촌주민수당 도입 △행정적 독립성 확보 △군민 통합 정치 실현 등을 핵심 방향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선7기 군수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덕분이었다”며 “지난 4년간 마을 곳곳을 돌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다시 군민 속으로 들어가 고창의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군수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인



물 교체가 아닌 고창군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군수는 “51%가 아닌 100% 군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함께 고창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 햇빛연금”... 익산형 에너지 소득모델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예비후보는 유류부지 1,000만㎡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발생한 수익의 2%를 10만~30만 원, 마을 단위로는 월 500만 원 수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익산 시민에게 20년 이상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재원은 세금 인상 없이 프로젝트파워포인트(PF) 방식으로 마련하며, 정책금융과 주민참여 펀드를 결합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생산 수익을 시민과 공유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국비 확보 의지도 강조했다.

“시민 참여형 축구단 ‘FC익산’ 창단하겠다”

임택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택택 예비후보가 시민 참여형 축구단 창단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익산의 주인은 시민, 구단의 주인도 시민”이라며 가칭 ‘FC익산’ 창단 계획을 밝혔다.

이 구단은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약 1만 명의 시민과 익산시가 참여해 1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은 5만~10만원의 소액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는 FC 비르셀로나와 부천FC 1995를 사례로 들며 시민 주도형 구단 운



영 모델을 강조했다.

주요 의결절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유소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유소년, 생활체육, K4·K3리그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창단 첫해 K4리그 진입과 향후 K3리그 승격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은 익산시 지원 기업 후원, 티켓 및 시민 후원 등으로 다각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결속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